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이 철 희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이 철 희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요약

샤츠슈나이더는 전략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했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은 배의 키(rudder)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통합정당)이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아직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당면한 통합작업 때문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조속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부동층(swing voter)에 대한 FGI 결과, 이들은 MB와 한나라당을 불신하고 나라가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도 아니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새로운 정치와 인물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당 지도부의 과격적인 면모 일신, 통합과 연대에서의 과감한 리더십 행사, 인적 물갈이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진단이 다를지언정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일거에 대선의 경쟁구도를 바꿔놓은 힘, 정치적 지각변동을 일으킬 잠재력만큼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의 에너지를 민주당이 흡수해 내는 대대적인 혁신이 관건이다. 민주당(통합정당)이 예쁘게 통합하고, 멋있게 혁신하면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열정이 민주당(통합정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 식의 ‘안철수, 들어오라’ 는 요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상징하는 IT 가치, 수평적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공직 경험, 사회적 명망, 대중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충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스펙공전은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되레 후퇴시켰다. 이런 식의 스펙공전은 없어져야 한다. 정당의 구조적 혁신도 필요하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줄이고, 유권자 속의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안철수를 논외로 하면, 야권의 대권후보들은 여권에 비해 크게 열세다. 지지율 면에서도 유력한 경쟁자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인물 선거가 아니라 구도선거로 가야 한다. 인물 경쟁력이 아니라 이념적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선명한 대립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구도선거론이다. 총선에서도 구도전략이 필요하다. 권력 자원에서 우세를 누리는 보수와 싸우려면 인물선거가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는 전략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구도전략은 1994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5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들로 인해 총선을 하나의 컨셉으로 묶는 것이 쉬어졌다. 트위터 이용자의 87.6%가 20~30대다. 투표성향으로 보면 진보가 49.4%이고, 보수는 9.0%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트위터는 진보 매체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프레임 선거가 가능해졌다. 정당의 구조도 SNS에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대중 집회 방식의 구태의 연합으로는 지금의 소통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는 방식의 고색창연합으로는 여론의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다.

구도가 더 중요하지만 인물에 대해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이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성공했던 배경에는 새로운 인물의등장이 있었다. 공화당혁명엔 강리치 등이 주도했고, 열린우리당 기적은 정동영 등이 이끌었다. 따라서 구도를 잘 대변하는 인물이 있을 때 구도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선거를 바라보는 데에 우리 유권자들이 더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도 인물이요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복지가 시대적 대세가 됐다. 그렇지만 복지를 2012년 선거의 기본구도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복지를 놓고 찬반대결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체는 복지정책을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비전과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메신저(messenger)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message)가 좋아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복지를 넘어서는 경제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0년부터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성장주의가 쇠퇴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20~40세대의 저항은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2008년 총선에서 기권했던 층들도 이제 투표에 나서고 있다. 정치지형을 바꾸고 있는 세 요인의 힘을 잘 보여준 것이 지난 10월 26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복지 때문에 생겨난 선거인데도 20~40대의 정치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궐선거인데도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기권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다른 아닌 것이다.

2012년 선거의 아젠다로 복지, 경제정의와 더불어 노동, 교육을 강조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노동이

중요하다. 양극화의 중심에 교육 불평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3+1에 버금가는 정책이 없다. 있더라도 공론화하고, 쟁점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중도노선은 인정하기 힘들다. 기존 지지층의 결집 없이 중도층의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은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이슈나 인물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인물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서 중도를 지향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민주당(통합정당)이 진보층의 확실한 정치구심으로 자리 잡아야만 그 속에서 인물경쟁도 가능해진다. 보수는 이익에 반응하고, 진보는 가치에 반응하는 패턴의 차이 때문에도 정체성이 중요하다.

과거 성공 때문에 지역연합으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규모에서도 절대적으로 열세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을 재현할 만큼의 주역도 파트너도 없다. 계층으로 가야 한다. PK 등 지역의 이탈도 경제적 이해 때문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야권 득표의 동력은 20~40대였다. 20~40세대의 진보성향은 사회경제적 이해가 추동한 것이다. 이런 흐름을 민주당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노쇠화를 극복해야 한다. 유권자 비중에서 22.1%를 차지하는 20대가 당원 비중에서는 6.1%에 불과하다. 이런 늙은 정당에서 벗어나야 민주당(통합정당)이 산다.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이 철 희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1. 들어가며	8
2. swing voter에 대한 FGI 조사 결과와 함의	11
3.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	16
4. 2012년 선거의 구도	22
1) 인물 선거 vs 구도 선거	22
2) 복지 대 반복지 구도가 답인가?	32
3) 정치지형의 변화	41
4) 대안 구도에 대한 검토	52
5) 중도노선 또는 진보노선?	58
6) 계층인가, 지역인가?	63
5. 맺으면서	65
참고문헌	69
민주정책연구 발간자료	

표목차

〈표 1〉 안철수 신당 필요성	17
〈표 2〉 1994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24
〈표 3〉 16대 대선 결과	45
〈표 4〉 17대 대선 결과	45
〈표 5〉 수도권 1,164개 읍면동의 특성(손낙구, 2010)	46
〈표 6〉 총선에서의 정당별 패권적 지역득표율(13-18대 총선)	64



그림목차

〈그림 1〉 내년 총선 범야권단일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 지지여부	11
〈그림 2〉 좌담회 참석자의 심리모형.....	12
〈그림 3〉 민주당을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	14
〈그림 4〉 민주당 정당 이미지 개선방안	15
〈그림 5〉 17대 총선 결과	25
〈그림 6〉 4.27 재보선 시간대별 트윗 추이와 분당을 득표율 변화	27
〈그림 7〉 트위터에서 정치관련 글 추세 및 트위터 이용자 연령대별 구성비	27
〈그림 8〉 2030 인물과 정책선호도	32
〈그림 9〉 세금관련 여론조사 결과.....	34
〈그림 10〉 경제성장과 복지확대 여론조사 결과.....	34
〈그림 11〉 제5회 지방선거 정당별 총득표율(%).....	42
〈그림 12〉 2011년 서울시장선거 출구조사 연령별 지지율	43
〈그림 13〉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사회 이념 무드(mood)와 양극화 변화 추세	47
〈그림 14〉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48
〈그림 15〉 2030 의견대변 정당.....	52
〈그림 16〉 16대 대선후보 지지도 추이	59
〈그림 17〉 서울지역 민주당원 VS 서울유권자 비율	66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이철희(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1. 들어가며

사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떻게’가 바로 전략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개인들이 뜻을 모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기제다. 달리 말하면, 뭔가 이루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샤프 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통찰은 옳다. 그가 말했다. “정치의 핵심은 전략이다(Strategy is the heart of politics).”

로스(Joel Ross)와 카미(Michael Kami)에 따르면 전략이 없는 것은 배에 키가 없는 것과 같다. “전략이 없다면 방향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키가 없는 배와도 같다(Without a strategy the organization is like a ship without a rudder, going around in circles)” 그들은 덧붙인다. “전략이 없다면 갈 곳을 잃은 떠돌이와 같다(It 's like a tramp;

* 이 페이퍼를 위해 부동층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공개 자문과 토론을 거쳤다. 일부는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자문과 토론에 참여한 분들 중 본문에서 이름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거나 이 페이퍼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페이퍼의 작성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it has no place t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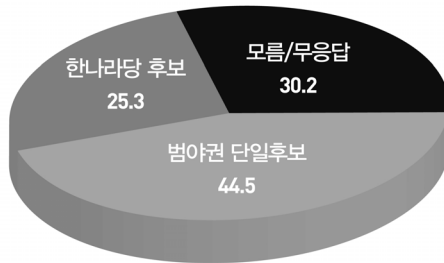
정처 없이 헤매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통합정당)이 승리하려면 올바른 전략이 있어야 한다. 승리전략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여건이 좋고 분위기가 무르익어도 불안하기 마련이다. 1992년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그 이전에 이미 세 번 연속 패배할 정도로 보수당이 장기집권한 터라 유권자의 변화열망이 적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동당의 우세가 확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에 빠지고 말았다. 그 패인은 전략에 있었다.

시아를 양(洋)의 서(西)에서 시(時)의 고(古)로 넓혀 보자. 만약 장량의 전략이 없었다면 날건달 유방이 명문가의 자손에다 대세를 장악한 항우를 제압하고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장량은 한신이 독자세력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를 유방의 휘하에서 풀어 자유롭게 전장을 휘저을 수 있게 했다. 그러한 대담한 전략으로 절대 열세, 연전연패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승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전투에선 져도 전쟁에선 이기는 장량의 전략이 없었다면 한(漢) 왕조의 개국도 없었을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나? 반MB는 가히 상식이 됐다.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MB를 거론하는 것이 짜증스런 일이 됐다. 이처럼 누가 봐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리서치 10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MB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67.3%가 공감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11월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5.3%에 불과했고, 야권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44.5%로 거의 2배에 육박했다.

〈그림 1〉 내년 총선 범야권단일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 지지여부

(문)만약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한나라당과 맞대결을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출처 :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 11월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000명, RDD 여론조사〉

그렇다면, 민주당은 승리할 준비가 충분한가? 일반적인 선거 매뉴얼에 비춰 보더라도, 아직은 아니다. 통합의 성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통합이 만들어내고 또 통합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할 혁신의 내용이 아직 부실하다. 다시 말해 혁신적 통합이거나 통합적 혁신이어야 하는데, 아직 이 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부실하다. 어떤 전선을 구축할 것이며, 어떤 아젠다를 내세울 것이며, 어떤 인물 콘셉트로 승부할 것인지 등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선거는 구도·전선이 좌우한다는 말만 믿고 느긋해하기엔 유동적 요인이 너무 많다. 흔히 ‘안철수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흐름이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反한나라 非민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철수 현상의 에너지, 기대와 요구를 민주당(통합정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면 설사 총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현상은 지속적으로 민주당(통합정당)을 위협할 것이다. 기분 나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주 ‘지랄 같은’ 현실이다.

민주당(통합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임하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총·대선 승리의 관점에서 통합과 혁신이 검토·관리되어야 한다. 보다 크게는 야권의 재구성 전체를 총·대선 승리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페이지는 총·대선 승리 전략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2. swing voter에 대한 FGI 조사 결과와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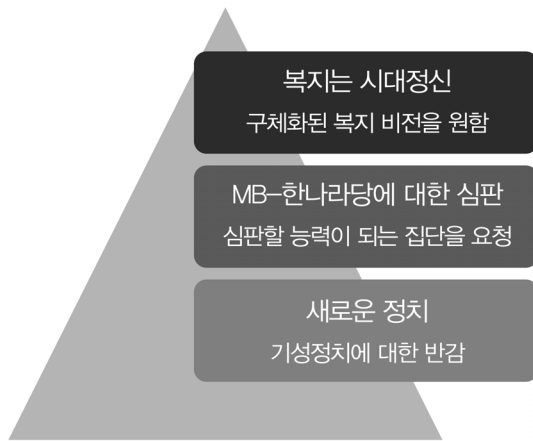
지난 9월 17대 대선이나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또는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가 2010년 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지지한 25세~55세 연령층을 표적 유권자층으로 설정해 FGI를 실시했다.

이들의 다수는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진보적인 방향’은 구체적으로 복지의 확대, 대기업·부자 위주의 경제에서 탈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를 뜻했다. 이들은 또 MB·한나라당에 대한 반대정서를 강하게 표출했고, 동시에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그 강도가 높았다.

MB·한나라당에 대한 반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기저요인이기는 하지만 반대 이유를 해소하는 투쟁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야권이 실패하고 있다는 민의는 많은 함의를 가진다. 투쟁의 측면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야권이 소위 ‘MB 정책’ 중 하나라도 저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의식의 차이로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면피할 수 없는 점, 즉 투쟁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

사실 대선 패배 후에는 효과적인 대여투쟁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다. 그 시작은 뒤이은 총선에서의 대대적인 혁신, 예컨대 대폭적인 물갈이와 과감한 정책 재검토(policy review)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그러한 혁신 대신에 ‘욕망의 정치’ 운운하면 유권자들의 변심을 타했다.

〈그림 2〉 좌담회 참석자의 심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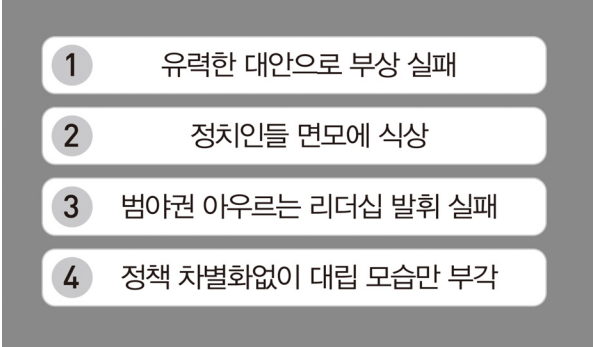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의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장외 정치집회가 어렵다. 민주당이 아무리 쥐어짜도 1만명 정도 모으는 게 최대치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이 좋은 예다. 반면에 〈나꼼수〉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가볍게 2만 명을 넘게 모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미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했다. 자발성과 발랄함을 기본으로 하는 촛불집회, 청춘콘서트 같은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마당을 바꿔야 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대응했다. SNS의 활용에도 대단히 무색했다.

이러니 FGI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공히 당리당략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못미더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없지 않다. 사실 아웃사이드(outsider)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열어놓는 대통령제의 특징, 운동정치가 제도정치를 압도하면서 이뤄진 민주화의 전통, 보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정당체제 및 그 결과 생겨난 성장시장 위주의 정책레짐 등의 요인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 참신한 대안을 찾는 ‘탈정치 현상’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 야권이 저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FGI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대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데에서도 이런 점은 확인된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고 보수정당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서민정당이고 진보적 정당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그리 깊지 않았다. 요컨대, 문제는 신뢰인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는 우선 민주당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응답자들이 지적했다. 정당의 존재는 정당이 대중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동원하는 기능에서 찾아진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유권자의 인식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한다.

18대 총선 후 12~13%로 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20%대로 회복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각성효과와 현 정부여당의 잘못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었다. 선거에서 불신임 받은 정당치고는 너무 한가했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소홀했다. 그랬기에 FGI 응답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면모에 식상한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아쉬워하는 대목은 또 민주당이 범야권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1년 4월 ‘순천을 무공천’ 방침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전에는 민주당은 규모의 우위만 앞세울 뿐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림 3〉 민주당을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

- 
- 1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실패
 - 2 정치인들 면모에 식상
 - 3 범야권 아우르는 리더십 발휘 실패
 - 4 정책 차별화없이 대립 모습만 부각

응답자들의 마지막 지적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립하는 모습만 드러냈다는 점이다. 대립구도나 반대 스탠스에 치중하면 그 결과, 즉 누가 이겼느냐 막아 냈느냐 못했느냐의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프레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 거칠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어차피 수적으로 열세이니 못 막아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태도야말로 무능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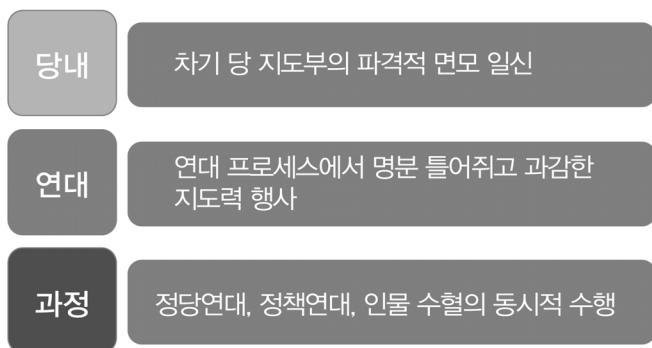
미국 프로야구팀 오클랜드에 빌리 빈이라는 단장이 있었다. 그는 연봉이 형편없는 선수들을 모아 꼴찌 팀을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키고, 리그 20연승이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이른바 머니볼(moneyball) 리더십이다. 이런 사실은 마이클 루이스의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그렇다. 문제는 무능이지 수적 열세가 아니다.

2007년과 2008년 한나라당을 지지하다 2010년 야당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MB-한나라당 심판을 들었다. 민주당과 후보의 경쟁력을 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개 선거는 여당에 대한 호·불호가 선차

적 요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택대안이 불가피하게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마지못해 뽑는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생기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크게 보면 정체와 분열이다. 분열은 통합으로 풀어야 하고, 정체는 혁신으로 풀어야 한다.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이 가야 한다. 혁신적 통합이 되어야 하고, 통합적 혁신이 되어야 한다. 통합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기존 야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요동치는 분위기는 이런 사실의 반영이다. FGI 응답자들도 정당 간 이합집산(통합)은 부수적 요소로 이해하고, 참신한 인물에 기초한 새로운 흐름의 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차기 당 지도부의 파격적인 면모 일신, 통합 과정에서 리더십 발휘를 거론했다. 요컨대, 통합하되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하며 IT복지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민주당 정당 이미지 개선방안



FGI에 응한 응답자들은 부동층(swing voter), 즉 정당 충성도가 높지 않고 변화를 선호했다. 정책과 인물에 대해 꼼꼼하게 뜯어보는 분석적 성향도 보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비전, 호감을 주는 정당 면모 일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통 큰 행보가 필요하다.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낡은 이분법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가차노선정책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3.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

현재의 한국정치, 내년의 총·대선을 조감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현상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현상이 빚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다들 의미 있는 분석이고, 일리 있는 주장이다. 어떤 분석과 주장을 받아들이든 안철수 현상이 초대형 정치태풍으로 성장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현상의 위력은 여지없이 확인된다. 원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전에 안철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다. 출마 반대는 39.5%였다. 이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51.5%가 총선 전 안철수 신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30.4%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여론조사의 비교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것을 비교해야 한다. 때문에 앞의 두 조사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간접지표로 읽으면 그리 큰 오독은 아닌 듯 싶다.

〈표 1〉 안철수 신당 필요성

		Q) 안철수 신당 필요성				
		합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잘모름
		빈도	열%	행%	행%	행%
합 계		1058	100.0	45.2	40.1	14.7
정 당 지 지 도	한나라당	238	22.5	22.4	62.5	15.0
	민주당	259	24.5	51.5	36.3	12.1
	자유선진당	25	2.4	25.3	61.3	13.3
	미래희망연대	35	3.3	62.2	25.8	12.0
	민주노동당	61	5.8	61.2	22.0	16.8
	기타정당	81	7.7	60.0	30.8	9.2
	잘모름/무당파	358	33.8	49.2	33.1	17.7

출처: 프레시안-원지코리아 11월 25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 KT+RDD ARS여론조사

안철수 현상의 실체는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도 확인된다. 1:1 양자대결 조사에서 안철수는 한나라당의 박근혜를 추월했다. 코리아리서치 11월 조사의 양자대결에서 47.7%를 얻어 38.3%의 박근혜를 압도했다. 한국 리서치 11월 조사에서도 안철수는 50.1%로 38.4%의 박근혜에 대해 상당한 격차의 우위를 누리고 있다. 가상대결이 아니라 여러 대권주자들을 쫓아붙고 물어보는 단순지지율 조사에서도 안철수는 박근혜를 앞서기 시작했다. 리얼미터 10월 말 조사에서 처음으로 박근혜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한 때 역전당하기도 했지만 11월 중순부터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리얼미터 11월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29.6%, 박근혜 26.0%, 문재인 7.1%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진단으로 돌아가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안철수 개인의 매력을 주로 거론한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다. 낡은 것(status quo)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새 것에 대한 희구가 생겨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불신이 왜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선 한운형(2011)이 잘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의 열광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대의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아니다. 오히려 기성 정치권이나 정당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팀’을 구성해 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기성 정치권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거대흐름으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의 주요 동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혁신’이 중요하다. 백기철(2011)의 말처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가 아니라 안철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안철수로 대표되는 시대정신을 정치가 구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조운제(2011)의 지적은 정확하다.

“따라서 안철수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읽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정당개혁이다. 우리 정당은 정책이나 이념, 가치에 기반을 두기보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에서 나오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정치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유능한 인사나 뜻있는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정당들이다. (...) 정당이 미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산실이 돼야 한다. 안철수 교수든 누구든 개혁적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정당에 들어가 그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당들은 이러한 인재를 당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내부적 개혁을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정당들이 그런 개혁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 정당들을 해체해 재구성하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김윤철(2011)의 충고는 적절하다.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을 거부하기 보다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철수의 영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높고, 그 불신의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영입은 안철수와 민주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 현상은 대의제 질서 밖에서 불어 닥친 대중들의 ‘정당정치질서 재편’에 대한 열망의 반영이다. 안철수 현상의 수혜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치질서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적 대표 체제를 기존 정당들만의 ‘독과점’ 체제로, 정당조직을 더 이상 정치인과 정당 활동가들의 것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안철수 개인의 매력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민경우 등(2011)이 적극적이다. 이들은 안철수를 IT 시대의 가치와 대안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이해한다. 대안적 리더십은 수평적 리더십을 지칭한다.

“2002년 월드컵과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인 세대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으로 모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광장에는 기성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상상력이 분출했다. 광장 어디에도 수직적 지휘체계는 없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한 수평적 의견 공유가 만들어낸 새로운 광장이었다. 기성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광장정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중이 정치의 객체에서 정치의 주체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광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리더십이 아닐까? 안철수에 열광하는 대중이 바라는 것은 대중과 공감하고, 논의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1세기 열린 리더십의 모습이다.”

IT 세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과 수평적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적 혁신과 정당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경험, 사회적 명망, 대중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충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젊은이들이 이른바 스펙을 만드는데 그토록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정치권이야말로 스펙을 우선하는 인물충원을 해온 게 사실이다. 변호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국민들이 얼굴을 알아본다고 해서 영입하고 공천 줘서 선거에 내보냈다. 이렇게 충원된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새롭게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스펙 공천을 없애야 한다.

대안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 이른바 슈퍼스타 K 방식이다.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대중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 ‘따름’이 무조건적인 추수를 뜻하는 건 아니다. 정당은 대안을 정의해 제시하고, 그를 통해 대중을 동원해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정당이 주관적 기준을 정한 다음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천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물론 밀실공천이나 임의공천 등의 폐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슈퍼스타 K의 방식은 적실성을 가진다.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경쟁이 인기나 대중성 위주로 변질될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치를 위축시킨다. 시장에서의 우열, 역관계를 있는 그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치가 불편하기 마련이다. 정치를 위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치를 대중적·사회적 기반과 유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당의 뿌

리를 없애는 게 첩경이다. 이런 점에서 고비용 정치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구당을 없애고, 선거법을 통해 정치인과 대중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시장에서의 강자들이 사회적으로도 그 우위를 누리는 데 유리한 구도라 하겠다.

정치가 축소되면 정치인과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은 언론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언론, 특히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인물이 정치나 선거에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가 언론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다. 최근 SNS 등 대안매체가 부상하고, 나꼼수와 같은 대항언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성 언론의 힘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당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유권자 외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인적 혁신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누구나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거나 필터링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권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렇듯 IT 시대의 가치는 수평적 리더십과 동등한 파트너십이다. 따라서 정당의 경우도 이런 가치에 소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방대한 조직의 관료 시스템으로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정치학자 키(V. O. Key)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직으로서의 정당’ (Party in organization)의 비중을 줄이고 ‘유권자 속의 정당’ (party in the electorate)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비유컨대, ‘네트워크로서의 정당’ (party in network)으로 가야 할 것이다.

4. 2012년 선거의 구도

1) 인물 선거 vs 구도 선거

노무현 전대통령의 언급처럼 선거는 구도·전선 싸움이다. 아무리 후보가 좋아도 구도가 나쁘면 이기기 힘들다. 반대로 후보가 좀 시원찮아도 전선이 유리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전략적으로 해석하면, 유력한 후보가 없을수록 구도를 선명하게 잡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다운스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정당 간에 차이가 열으면 유권자들은 퍼스널리티, 기술적 경쟁력, 또는 비이데올로기적 요인(personality, technical competence, or some other non-ideological factor)이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안철수를 제외하고 보면 야권에서 유력한(relevant) 후보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후보로서 좋을까 하는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당장은 이념·노산정책에서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구도·전선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대선에 출마선언을 했으나 2008년 오바마의 지지율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았다. 줄곧 힐러리에게 뒤졌고, 1년 내내 20~30% 포인트의 격차를 줄일 수 없었다. 오바마가 낙관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또는 담대한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데 불안하지 않을 후보는 없다. 오바마를 담대하게 한 뒷배는 전략이었다. 오바마 선거의 캠페인 매니저였던 플러프(2009)가 쓴 책을 보라. 이들이 얼마나 시종일관 클린턴 대 오바마의 대결 구도를 기성 대 변화로 유자관리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성급하게 오바마가 얼마나 멋있는지 파는 매력공세(charm offensive)에 빠지지 않았다. 무릇 공심위상 공성위하(攻心爲上 攻城爲下)라, 사람의 마음을 공략해야지 성을 공략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지 않던가.

사르토리(1994)에 따르면, 소선거구-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지역주의(localism)와 선거구 중심(constituency-centered)의 정치를 결과하는 경향이 있다. 비례대표제와 달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정당 선거이기 보다는 인물 선거로 가기 쉽다는 뜻이다. 이런 점 때문에 김영순(2011)의 지적은 타당하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 하에서 유권자들은 복지나 조세, 노동정책 등 전국적인 수준의 정책을 준거로 정당에 투표하기 보다는 지역개발사업 등 선거구 수준의 쟁점을 준거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총선에서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권력자원이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보수의 경우, 캐리어를 가진 인적 자원이 진보에 비해 훨씬 풍부하다. 스펙경쟁에서 보수는 진보보다 언제나 구조적인 우위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분단사회에다 반공이데올로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간의 역관계는 한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인물 경쟁의 차원으로 선거를 국한하면 진보가 보수를 이길 재간이 없다.

두 가지 사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94년 미국 중간선거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을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킵치가 이끌던 공화당의 선거전략은 1918년 이래 처음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판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건 것이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의, 보수의 입법과제를 정리해서 제시한 정당 공약이었다. 선거 6주 전에 제시된 이 공약을 통해 선거를 단일 콘셉트로 치를 수 있었고, 그 결과 공화당은 압승할 수 있었다.

〈표 2〉 1994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Party	Seat			The Percentage of seats	Direct election
	1992	Elected	Net Change		
Democrats	258	204	-54	46.9%	44.0%
Independence	A	A	0	0.2%	0.9%
Republic	176	230	+54	52.9%	49.9%
Total	435	435	+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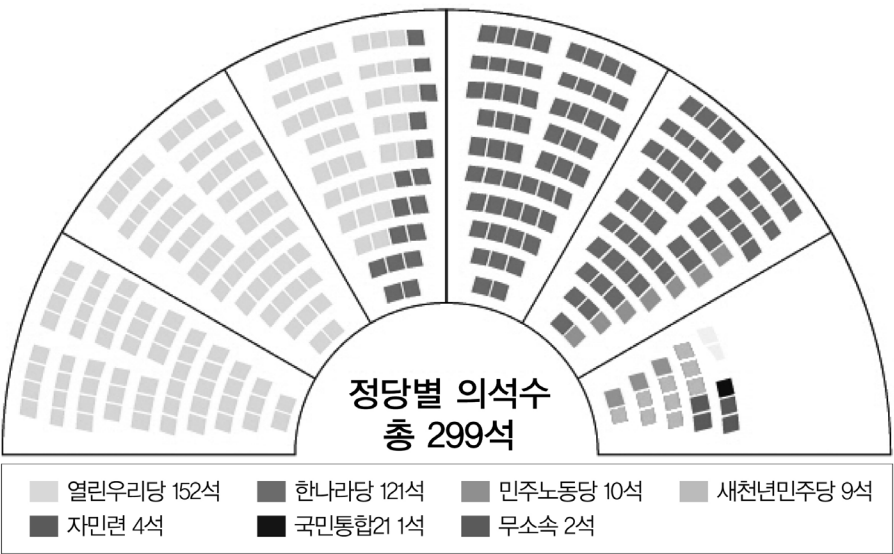
출처: 위키백과

미국의 공화당은 선거자금 모금에서 보듯 언제나 민주당보다 더 많은 권력자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30년이 유지된 뉴딜연합 등의 영향으로 상·하원 선거에서만큼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다 야당의 처지에 있던 터이니 공화당으로선 힘이 많이 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고안해 낸 선거 전략이 선거판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전국적 차원의 당 대 당 선거로 치르는 것이었다. 이 전략 때문에 당시 의료보험 개혁에 실패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40년 만에 의회 다수당을 바꾸는 변화를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있었다.

다른 하나는 2004년 대한민국 총선이다. 2003년 11월에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비록 여당이었지만 소수정당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했다.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출마시킬 공천 후보들의 면면이 다소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깨끗한 정치를 내걸었으니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원도 거의 없었다. 한 마디로 난감한 선거였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는 했어도 누가 봐도 열린우리당이 승리하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사상 처음으로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성공했다.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 때문이었다. 워낙 무모한 짓을 감행한 탓에 엄청난 쓰나미가 탄핵세력에게 밀어닥쳤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탄핵 전선이 총선의 개별 선거구를 관통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40여개 지역구로 쪼개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영·호남의 지역주의와는 별개로, 후보의 인물경쟁력이나 지역공약 등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친하고, 지역의 토호들과 깊은 연계를 가진 한나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지역구별 경쟁의 선거구도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버리는 단일 경쟁의 선거구도로 전환시킨 것이 탄핵 전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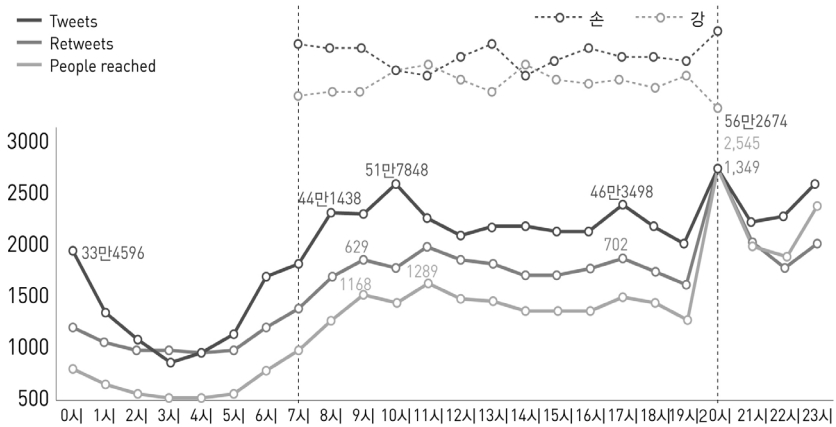
〈그림 5〉 17대 총선 결과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인물 선거가 아니라 구도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통합정당)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노선·아젠다·정책·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무당파나 중도층의 투표율이 낮은 총선의 경우 특히 이것이 승부처다.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구도 선거는 중요하다. 4.27 재·보궐 선거는 선거구가 전국에 산재했으나 전국 선거로 치러졌다. 통상 재·보궐 선거가 정치선거로 치러지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장덕진(2011)에 따르면 당시 선거의 전국화에는 SNS의 역할이 특히 컸다. 그의 분석은 이어진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 사용자 113만 명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8~12%로 추정되고,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당시 트위터 이용자 280만 명이 여론조사 상 지지율의 상당한 격차를 뒤집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트위터 이용자는 12월 5일 현재 547만 명이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월 전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대가 58.8%, 30대가 28.8%를 점하고 있었다. 20~30대의 비중이 전체 트위터 이용자의 87.6%나 됐다. 반면 40대는 10.2%, 50대는 2.2%에 불과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용자를 찾지 못할 정도였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보여진 20~30대의 투표성향을 감안하면 트위터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트위터 이용자 중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49.4%였고, 중도가 41.6%로 보수 성향의 이용자(9.0%)를 압도했다. 요컨대, SNS를 통해 전국을 하나의 선거로 묶는 것이 가능해졌고, 지지층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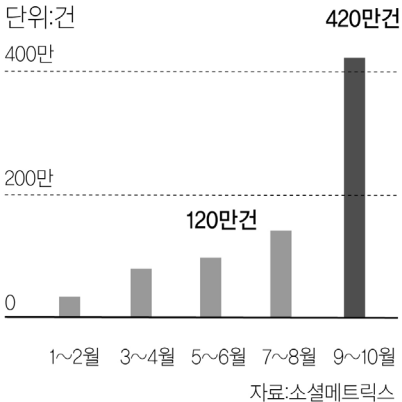
〈그림 6〉 4.27 재보선 시간대별 트윗 추이와 분당을 득표율 변화



〈출처: 장덕진 ‘4·27 재보선을 통해 본 소셜 선거의 특징과 전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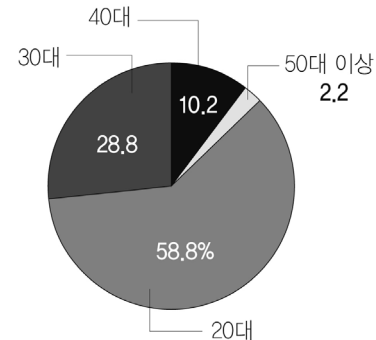
〈그림 7〉 트위터에서 정치관련 글 추세 및 트위터 이용자
연령대별 구성비

트위터에서 정치 관련 글 추세



트위터 이용자 연령대별 구성비

2011년 9월 현재(총 334만명) 단위:%



자료:한국광고주협회-미디어리서치 전국 1만명 조사

〈출처: 조선일보〉

인물 경쟁력이 있는 좋은 후보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후보’의 개념이 캐리어가 빛나는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학력이나 경력은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신 그가 속해 있는 집단·세력·계층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그가 살아온 길이나 소신이 당의 정책과 가치, 비전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후보다. 요컨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좋은 후보다. 필요조건은 계층직능집단흐름의 대표성이지 스펙이 아니라는 얘기다.

1994년의 미국 공화당이나 2004년의 대한민국 열린우리당은 새로움을 보여주었다. 과거와 달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새로움은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인물 또는 주도그룹의 면면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공화당은 강리치나 딕 아미 같은 인물들이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직선으로 뽑힌 정동영 등이 주도했다.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부상한 벼락스타들은 아니지만 대중들의 눈에는 새롭고 신선하게 비쳤다. 만약 공화당이 부통령을 지낸 댄 퀘일 등 식상한 인물들을 앞세웠다면, 열린우리당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득권 세력들에 의존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유권자들의 눈에는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니 공감을 얻는 효과도 없었을 것이다.

총선이 그렇다면 대선은 어떨까? 흑자는 인물중심의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념과 정책 혹은 세력 중심의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그것이 주요 변수도 작동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현상이 식어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가 깨지면, ‘박근혜 대 또 다른 대항마’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데다 유권자들도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는 것에 더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야권통합을 통한 세력 중심의 구도 형성도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본다. 세력 중심의 구도가 인물 중심의 구도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왜냐하면, 세력 구도가 형성되더라도 세력을 상징하는 이념과 정책, 인물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박근혜 vs 반 박근혜’ 식의 구도를 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대’ (anti) 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박근혜를 축으로 하는 인물 중심 구도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런데 ‘세력을 상징하는 이념과 정책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주장이 유효한 것일까? 여기서 영국의 신노동당(New Labour) 노선이 왜 10여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블레어에게 와서야 빛을 발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당이 대처리즘(신자유주의)을 대폭 수용하는 노선이 현대화(modernization) 또는 신노동당 노선이다. 이로써 보수당과 노동당 간에 이념·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없어져버렸다. 이럴 경우 인물 요인이 중요해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섰시한 블레어가 등장하고 나서야 17년 야당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선거에서나 인물은 중요하다. 정책이나 노선이 인물로 표현되고 상징될 때 유권자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직, 성실, 신뢰 등을 표상하는 인물이 더 경쟁력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정당이나 세력 간에 차별성이 분명하다면 인물 변수는 그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복지가 시대적 대세가 된 시점에 반 복지를 외치는 인물을 잘 생기고 멋지다는 이유만으로 내세워서는 이기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통합정당)이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더 크고 깊게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인물 변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권력자원이 부족한 진영이 이기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인물로 승부를 보려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야권으로서 안철수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은 큰 수확이다. 그러나 그 안철수라고 해서 MB·한나라당의 국정노선에 반대하는 60~70%의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고, 즉 양 세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간적 매력이나 성공신화만으로 이들을 결집시킬 수 없다. 안철수와 60~70%에 달하는 반MB·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 간에 서로 적응하는 과정은 건너뛸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인 것은 안철수가 60~70%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철수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정책과 노선의 대결구도가 우선이고, 인물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당 대 시민의 구도가 형성됐다.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시민이 정당을 누르더니, 본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마저 꺾었다. 문자 그대로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즉 기염을 토했다. 사실 10.26 서울시장 경선과 선거를 정당 대 시민 구도로 단순 해석하는 건 여러모로 무리다. 경선에선 시민후보를 민주당이 아닌 정당과 세력이 지원했고, 본선에선 야5당이 함께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 대 정당의 구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정당 대 시민 구도 때문에 인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특히 시민 사이드에서 유력주자(안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논리다. 정당 대 시민 구도는 낡은 정치 대 새정치 구도의 다른 이름이다. 결코 정당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이 인물과 정책 등에서 새정치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면 정당 대 시민 구도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새정치의 핵심은 정당이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이 계급계층직능 등에 따라 조직화된 바탕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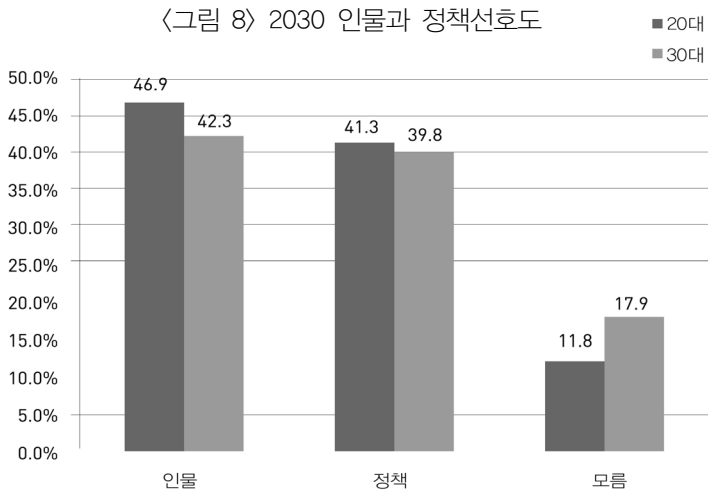
서는 것이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다. 즉, 정당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현대화(modernization)이다. 이 사회화·현대화 원칙에 맞게 인물, 제도, 정책, 관행을 바꿔야 한다.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46.1%였다. 매우 낮은 수치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관심이 낮은 이유는 관심을 가져야 할 동기부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동기부여가 약한 것은 판세가 이미 기운 탓도 있지만 주로는 여야 정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차이가 중요하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정당 및 후보자와 차별성이 있는 이념 및 정책을 제시할 때만 제고될 수 있다.” 정준표(2010)의 지적이다.

논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민주당(통합정당)은 보수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이 차별화 명제는 대원칙이다. 한나라당과 비슷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가 진보화의 동의어는 아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진보인 것은 맞으나, 그 수준은 다수승리연합(winning majority coalitions)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 과도한 진보화는 자족적 소수파노선이다. 예컨대, 최근의 여론조사나 FGI에서 확인된 바대로, 안보에서는 ‘보수성’을 강화하는 등 우클릭의 행보도 필요하다. 차별화에는 새정치, 새로운 인물과 세력 등을 일컫는 현대화의 과제도 포함된다.

다시 강조하건대, 구도가 인물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인물요인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임장관실이 용역 의뢰한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에 따르면 응답자의 44.6%가 인물선호를, 40.6%가 정책선호를 답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인물이라는 게 구도와 동떨어진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도를 ‘쉽고, 잘’ 상징하는 인

물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2030 청년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불확실한 미래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의 결과를 함께 해석하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대안’을 놓고 경쟁구도를 만들고, 그런 다음 이 구도를 인물로써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출처: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특임장관실〉

2) 복지 대 반복지 구도가 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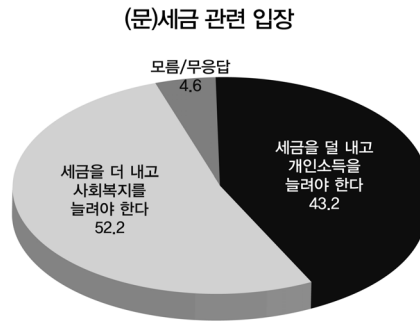
인물이 아니라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구도를 짤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복지 대 반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당·보수가 반복지 노선을 고수한다면 복지 대 반복지의 전선이 형성·유지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보편적 복지 노선에 대한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야권에 있으니 이렇게만 되면 싸움은 쉽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의 행보나 10.26 한나라당 쇄신의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역시 복지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이제 찬반 이슈가 아니라 우열 이슈가 됐다. 스톡스(1963)에 따르면, 전자는 대립쟁점(position issues)이고 후자는 합의쟁점(valence issues)다. 우열 이슈나 합의쟁점은 누가 더 잘 하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구도, 더 정확하게는 보편적 복지 대 차별적 복지의 구도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간명한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전선인가 하는 데에는 회의가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귀영(2011)이 잘 정리하고 있다.

그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경제 불안이 정치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는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 능력의 문제에 가까웠다. 경제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어떤 것이건 해결책은 경제성장 및 경제회복으로 귀결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성장주의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있다. 성장이 아닌 분배가 더 중요하며, 빈부격차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도 강력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 9월의 KSOI 조사에 따르면, 복지를 위한 증세에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세금을 더 내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 52.2%, ‘세금을 덜 내고 개인소득을 늘려야 한다’ 43.2%로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후보와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후보가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결과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후보’ 51.2%,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후보’ 45.6%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하면 복지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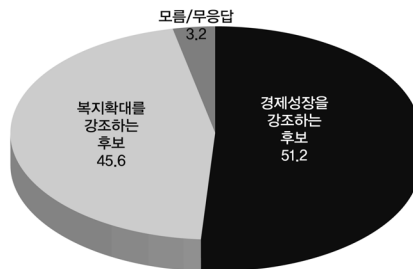
〈그림 9〉 세금관련 여론조사 결과



〈출처: KSOI, 2010. 9〉

〈그림 10〉 경제성장과 복지확대 여론조사 결과

(문)다음 대선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후보와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후보가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출처: KSOI, 2010. 10〉

복지 이슈가 갑자기 정치 이슈로 부상한 까닭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분배 요구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미흡하다. 서민들의 민생불안 문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사회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발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합의 가능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복지 이슈에 민주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듯 대중의 열망을 정치세력이 본격적 아젠다로 수용하면서 분배 및 복지 이슈가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분배 및 복지 이슈는 대중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다수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갈등 축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개혁 등의 이슈가 소수 고관심층만이 참여하는 갈등 구도를 지닌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 이슈는 다수의 대중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 복지라는 거대한 갈등 축을 어느 세력이 전유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가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될 것이다.

그동안 복지이슈는 진보 정당 및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기에 외형적으로는 복지이슈가 진보진영에게 유리해 보인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보편적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것도 진보진영이다. 하지만 복지이슈는 특정 진영이 선점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구의 경우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진 복지발전의 상당수는 보수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국에서도 주요 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권위주의 시대였다. 진보와 보수 모두 복지이슈에 일정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를 필두로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복지이슈를 제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되면 보수 세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 보수의 복지플랜은 현실에 기반을 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점에서 진보가 내세우는 ‘거창한’, ‘근본주의적’ 복지 보다

보수의 복지가 대중에게는 훨씬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2012년 대선에서 복지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복지의 범위와 방식을 놓고 정치세력이 경쟁을 하게 될 경우 보수진영이 우위에 설수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아젠다가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조건이다. 당시 여권이 무상급식을 복지포폴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무상급식 찬성 대 반대의 구도가 형성되었던 조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즉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통치가 맞물리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형성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이 같은 구도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보수진영의 후보가 무상급식 등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진보진영 후보의 입지는 협소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복지논쟁 구도가 전면(100%) 무상급식이나, 단계적(50~70%) 무상급식이나의 구도로 나타난 것처럼 2012년 대선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보수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가 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설득 없이 복지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대중의 관심은 오히려 실현가능성으로 향할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전면 무상복지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계적 복지가 대중에게는 더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실현가능성면에서는 아직까지 집권경험이 풍부한 보수 세력이 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진보진영의 ‘무상’ 복지 아젠다는 다분히 위험할 수 있다.

진보진영이 복지 아젠다를 기존의 협소한 갈등 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가 기존의 보수 세력이 제시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중요한 것은 100% 무상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절박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정치주체의 능력이다.

한편, 이와 달리 차기 대선이 복지 프레임으로 치러질 경우 보수진영이 분열되는 등, 자기 뒷에 빠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진보의 이슈이므로 보수진영이 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순간 진보적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이 복지를 강조하면 할수록 진보가 집권해야 할 당위성을 강화시켜준다는 논리다. 또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면 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보수진영의 접근이 모순적이고 결국 복지의 실현 의지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여진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이 복지를 주장하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이에 대해선 김윤철(2011)의 분석이 좋은데, 기본 로직(logic)은 이렇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진영을 지탱하는 핵심층은 ‘박정희 향수층’으로서 ‘성장주의’를 신봉해온 층이다. 이들에게 성장이란 성장의 효과로 서민층의 경제적 삶도 나아지는 것, 즉 ‘공동체형 성장주의’ 또는 성장과 분배가 별개가 아닌 ‘일체형 성장주의’이다. 이렇듯 보수층이 선호하는 성장주의에는 분배 및 복지가 내포되어 있기에 보수진영이 복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보수층이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치공학적 측면으로 좁히더라도 보수진영의 복지 프레임 수용이 대선에서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 이슈만으로는 어렵다는 비판은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개혁 전망 없이,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에 의한 소득 재분배, 즉 2차적 분배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위한 대

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개선과 같은 1차적 분배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유연화를 대신할 명확한 대안이 전제될 때만 복지 이슈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은 복지 이슈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등 자유주의적 색채의 야당을 겨냥하고 있는데, 노동과 고용 등을 포함한 경제분야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지 이슈로 보수정당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양태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비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이슈는 범위의 문제로 치환되고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무상급식 문제에 적용해보면 무상급식 논쟁은 학교에서 공짜 밥을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모델이 좋은가라는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즉 무상급식 논쟁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진보가 보수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모델에 대한 논의 없이 무상급식의 필요성, 중요성으로 논의를 끌고 갈 때 진보진영은 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가 지속적인 파급력과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복지문제에 대한 비전, 복지가 대중이 열망하는 새로운 경제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복지와 새로운 대안 경제제체를 연결해주지 못한다면 ‘왜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주느냐’는 선별적 복지주장이 예산의 우선순위 등 현실적 문제와 결합하면서 지지기반을 확산할 수 있다. 복지문제는 단편적인 이슈 하나를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비전이나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뚱맞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냥 반MB만 외

치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 민주당 패권주의라며 욕할지 모르지만 아주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는 아니다. 총선과 대선이 붙어 있다는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라고 한다. 반MB 정서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가 기초를 이룬다면 1:1 구도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은 무난해 보인다. 회고적 투표 분위기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있는 이른바 황혼선거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여기에 비춰 본다면 2012년 총선은 전형적인 인기가 추락한 정부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황혼선거(counter-honeymoon election)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반MB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다 많은 세력, 단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의만을 모색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합의는 정책집행권을 가진 행정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선거 때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견제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이든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입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단언컨대 위험하다. 대선을 망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

앞서 언급했던 1994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좋은 예다. 그들은 승리한 뒤 자신들의 아젠다를 ‘닥치고’ 밀어붙였다. 하원의장 김리치는 수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렇게 무한질주하다 결국 2년 뒤 대선에서 공화당은 또 다시 패배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 자크 시락은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의회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마치 정부(government)를 장악한 것처럼 오버하면 소탐대실하기 마련이다. 딕 모리스의 통찰처럼 정치에서는 승리 뒤에 패배가 들이닥친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의회 권력을 잡더라도 제한된 아젠다를 아주 정교한 게임플랜 아래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 책임이 의회 다수당에게 있다는 식으로 가면, 그럼으로써 박근혜가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해소할 대안으로 부각되게 되면 여론 흐름은 많이 바뀔 것이 자명하다. 특히 박근혜를 MB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구도를 본의 아니게 조성해주게 되면 대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게다가 다음 대선에서는 회고적이라기보다 전망적 투표가 더 많을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김윤철(2011)의 지적을 다시 참고할 수 있다. “2112년 대선은 전망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전망이 투영된 대안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지형에서 대안적 인물과 이념·정책의 제시에 기초하지 못한 ‘MB 심판론’은 그다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사실 그 어떤 선거도 회고와 전망 중 어느 한쪽에만 기대어 치러지지 않는다. 특히 대선의 경우 그러하다. 또 회고투표였냐 전망투표였냐는 선거결과를 둘러싼 ‘해석투쟁’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어떤 선거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갖는 의미도 없다. 어디로 유도해갈 것인지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다. 민주화 이후의 모든 대선은 기본적으로 전망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 김대중의 ‘준비된 대통령’, 노무현의 ‘낯은 정치 청산’이 승리로 이어졌던 것은 전망투표 때문이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이명박 승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선이 전망적 투표의 장이 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잘 정제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정리하면, 총선과 대선을 정권교체라는 프로세스(process)를 구성하는 두 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계기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총선에서는 광범위한

반MB 연합 구축에 집중하고, 대선에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는 전략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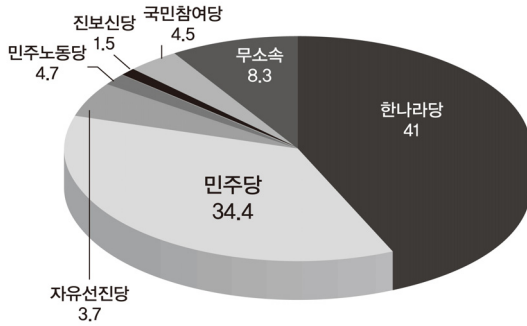
이 전략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 총선에서는 특정 노동정책에 대한 합의보다는 의회권력을 잡았을 때 노동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누구를 앉힐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릇 사람이 곧 정책이라고 했다.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 하나 하나에 세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어떤 사람을 그 정책 담당 포스트에 놓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때론 더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지형의 변화

한국정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7년 총선과 2008년 대선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던 압도적인 보수우위, 한나라당 지배의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은 48.7%를 얻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은 26.1%를 얻었다. 보수진영과 민주진보진영의 대결로 환산하면, 65:35의 구도였다. 이 정도면 완벽한 열세라고 해도 무방하다. 16대 대선에서 보였던 47:53의 구도에 비하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이런 보수 우위의 정치지형은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소속과 존재감이 미약한 기타 정당을 제외하면, 보수와 민주진보진영 간에 45:45의 호각세로 돌아선 것이다. 흔히 ‘잃어버린 600만 표’라고 말해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다가 2007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찍거나 기권한 사람들이 바야흐로 새로운 정치성향과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제5회 지방선거 정당별 총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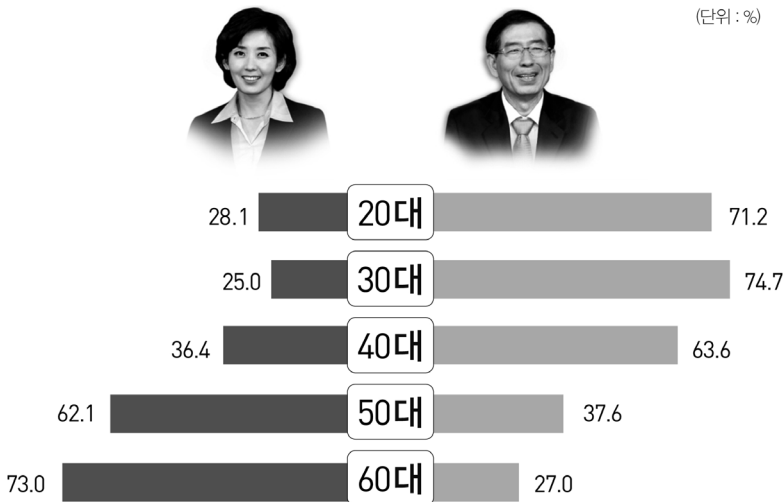
이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3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issue evolution)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국의 뉴딜체제가 무너지고 공화당 우위의 정치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도덕적·문화적 이슈들이 끼친 영향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의 등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젊은 투표층이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정치정향(partisan imprint)을 표출하면서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논리다. 마지막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기권층을 대거 동원함으로써 지형이 바뀐다는 관점이다. 기존 투표성향에서 이탈하는 전향(conversion 또는 swing)없이 동원(mobilization)만으로 정치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설명할 수 없다. 이 관점 역시 동원에 강조점을 두는 것일 뿐 전향이 아주 없다고 보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슈나 아젠다의 측면에서도 성장이나 시장에서 복지나 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복지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노동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못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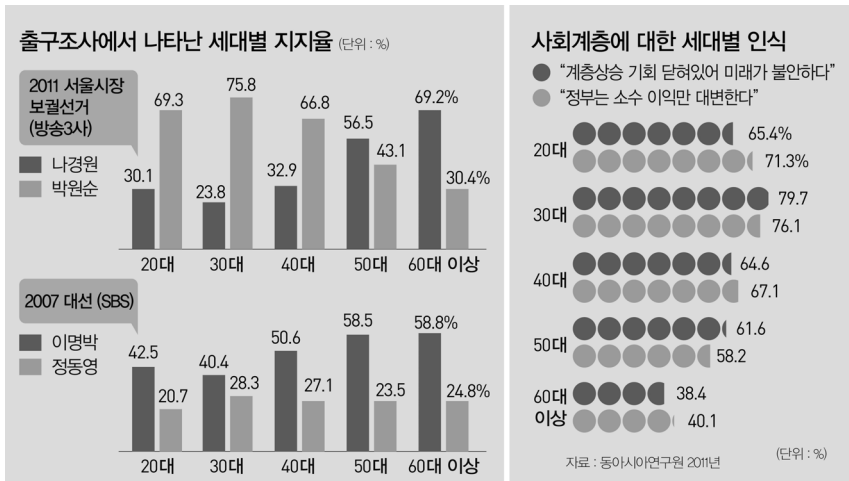
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세대, 즉 20~30대의 변화 열망은 거의 압도적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방송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20~40대에서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은 한나라당후보 나경원을 압도했다. 20대에서는 69.3% 대 30.1%, 30대에서는 75.8% 대 23.8%, 40대에서는 66.8% 대 32.9%의 지지율을 보였다. YTN의 출구조사도 다르지 않았다. 두 후보 각각 20대에서는 71.2% 대 28.1%, 30대에서는 74.7% 대 25.0%, 40대에서는 63.6% 대 36.4%로 나타났다.

세대균열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됐던 2002년의 경우, KRC 출구조사에서 노무현은 20~30대에서 이회창을 크게 앞섰다. 각각 20대에서 59.0% 대 34.9%, 30대에서 59.3% 대 34.2%, 40대에서 48.1% 대 47.9%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1년 세대균열을 더 깊어져 이제는 40대까지도 양극의 정치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2011년 서울시장선거 출구조사 연령별 지지율



〈출처: YTN-한국리서치 출구조사〉



(출처: 한겨레신문)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은 12,014,277표를 얻었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은 6,174,681표를 얻었다. 투표자 수가 늘어난 것을 무시하고 규모만 비교하면 5,839,596의 표가 사라진 셈이다. 진영으로 계산하면, 민주진보진영은 2002년 1,300만 표에서 2007년 826만 표로 줄어들었다. 474만 표가 이탈했는데, 이 중의 일부가 2007년에 2002년 대비 360만 표가 늘어난 보수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100여만 표가 기권한 것이 된다. 2007년의 유권자 수는 2002년에 비해 270만 정도 늘었는데, 투표자 수는 오히려 100만 가량 줄었다. 이 수치를 감안하면, 2002년 때 노무현을 찍었다가 2007년에 기권한 유권자 수는 규모 면에서 보수 후보로 전향한 수만큼 된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일부가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리딩 그룹(leading group)이다. 따라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동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표 3〉 16대 대선 결과

득표순위	기호	이름	정당	득표율(%)	득표수(표)	비고
1	2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48.9	12,014,277	당선
2	1	이회창	한나라당	46.6	11,443,297	
3	4	권영길	민주노동당	3.93	957,148	
4	3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0.3	74,027	
5	6	김길수	국태민안호국당	0.2	51,104	
6	5	김영규	사회당	0.1	22,063	
7	7	장세동	무소속	기권		
합 계				24,784,963표		

〈표 4〉 17대 대선 결과

득표순위	기호	이름	정당	득표율(%)	득표수(표)	비고
1	2	이명박	한나라당	48.7	11,492,389	당선
2	1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26.1	6,174,681	
3	12	이회창	무소속	15.1	3,559,963	
4	6	문국현	창조한국당	5.8	1,375,498	
5	3	권영길	민주노동당	3.0	712,121	
6	4	이인제	민주당	0.7	160,708	
7	8	허경영	경제공화당	0.4	96,758	
8	10	금 민	한국사회당	0.07	18,223	
9	7	정근모	참주인연합	0.06	15,380	
10	9	전 관	새시대참사람연합	0.03	7,161	
-	5	심대평	국민중심당	-	-	기권
-	11	이수성	화합과도약을위한 국민연대	-	-	기권
합 계				23,732,854표		

누가 기권하는가? 라이프트(1997, 1999)는 투표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차이는 소득자산의 문제다. 대체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다.

투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투표해도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손낙구(2010)의 실증적 분석에 의해서도 못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출구조사에서도 집 있는 사람의 투표율은 52.0%였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45.3%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가 소유자의 52.7%가 나경원에게 투표했고 전·월세 입주자의 57.0%가 박원순을 지지했다. 기권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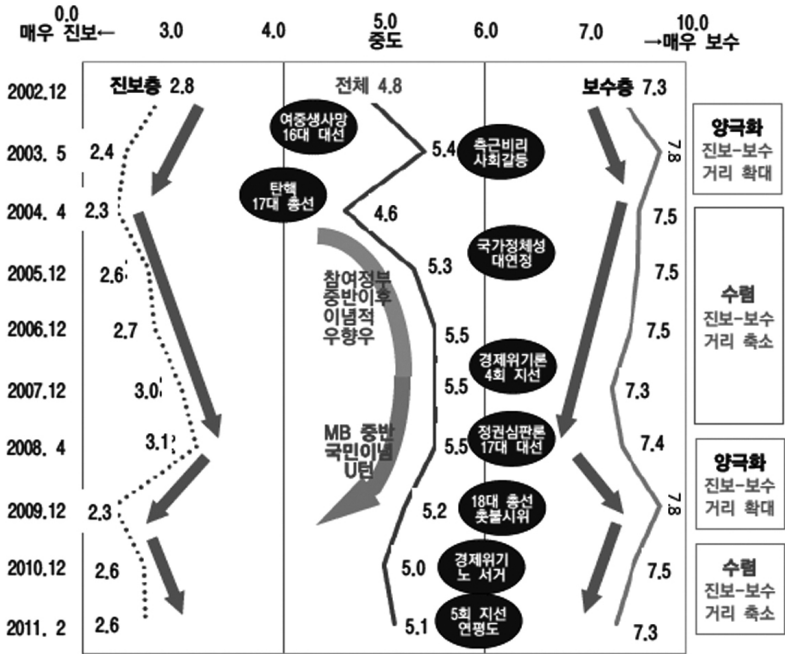
서복경(2010)의 분석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개 세입액이 낮은 지역일수록 못 산다. 16대 대선에서 세입액이 낮은 서울의 자치구일수록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높은 자치구일수록 16대의 경우 이회창, 17대의 경우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가 많았던 자치구일수록 17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라폭이 컸다. 결국 17대 대선에서 저소득층 유권자 집단일수록 투표 불참(기권)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들이 왜 기권했다가 다시 투표에 나서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일단 2002년 노무현의 정채상·공약과 2007년 정동영의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표 5〉 수도권 1,164개 읍면동의 특성(손낙구, 2010)

구분	투표율 하위 20% 동네	투표율 상위 20% 동네
2004년 총선 투표율	52%	68%
주택 소유	48%	69%
무주택	52%	31%
아파트거주	23%	77%
주택거주	50%	14%
한나라당 득표율	33%	41%
민주당 득표율	48%	41%

당시의 정치과정을 반추해 보면, 2002년에 비해 2007년은 많이 우클릭했다. 이념균열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양자 간의 차이는 2002년에 비해 2007년에 많이 줄어들었다. 2006년의 경우 남북문제, 지역균형개발, 새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나, 2007년의 경우 정책과 무관한 BBK가 거의 유일한 이슈였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실은 확인된다. 요컨대, 2007년 민주당은 이념·정책·노선 등에서 한나라당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기권했던 이들이 2010년부터 다시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상급식 등 민주당이 한나라당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별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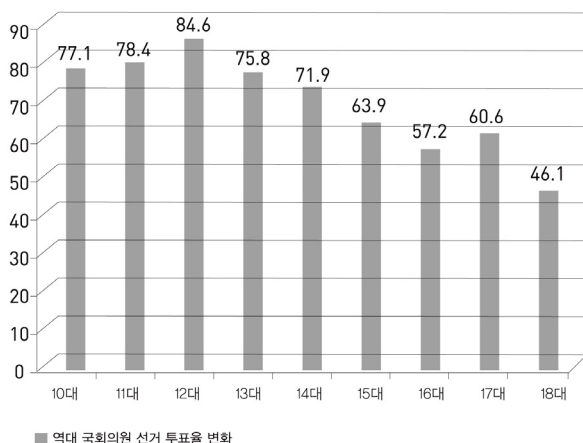
〈그림 13〉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사회 이념 무드(mood)와 양극화 변화 추세



〈출처: EAI, 2011〉

이런 점은 최장집(2008)의 통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왜 심각하게 낮은가에 대해 그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대안들이 모두 보수적이기 때문” 이라고 잘라 말한다. 유권자는 주어진 것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니 상대적으로도 좋다는 점이 없으면 기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이 좋아할 만한 여지를 갖는 것은 기권층의 투표를 이끌어 내는 필수전제라 하겠다.

〈그림 14〉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그런데 차별화가 곧 진보화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한 기권층들이 만약 민주당의 우경화 때문에 이탈했다면 진보적 대안, 즉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어야 옳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한 사표 방지 심리 등이 작동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지는 싸움이라면 ‘소신대로 찍자는 유권자’ (sincere voter)가 2002년에 비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이

다. 2007년 투표 결과 민주노동당 후보는 2002년에 비해 24만 표 가량 줄어들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민주당(통합정당)이 진보정당과도 차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 연대를 넘어 정책적 일체화를 추구하는 노선은 집권을 위한 다수와 형성 노선이 아니라 자족적인 소수파 노선이라고 하겠다.

세대균열의 해석도 중요한 문제다. 세대문제에 대해서는 유창오(2011)가 가장 적극적이고 단호하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20~40대 진보 블록과 50~60대 이상의 보수 블록이 양립되는 양상으로 세대 구도가 변했다. (...) 40대의 민주적 성향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형성된 ‘가치·문화적’인 것이라면, 20~30대의 진보적 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를 겪으면서 형성된, ‘계층적·경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 의식과 세대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신규로 사회에 편입한 20~30대에게 하위 80퍼센트 트랙만이 허용되는 ‘20대 80 사회’가 이들을 진보적으로 만든 것이다. (...) 201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은 과연 대한민국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균열에 해당되는 것인가? (...) 지금 젊은 세대가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선호하고, 나아가 ‘탈지역주의’ 색깔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1년 대한민국에서 “세대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인 동시에, 정치적 성향과 선호가 분명한 집단이다. 2011년 현재, 세대는 계급이다.”

이에 대해 프레스미안의 강양구가 반론을 제기했다. 그의 문제의식은 명쾌하다. “20대와 40대, 30대와 40대의 이해관계가 같은가? 아니, 40대를 꿰뚫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몇 번의 투표에서 20~40대가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보(?) 세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지적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면 어떨까? 어느 세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은 변화를 갈망하기 마련이다. 소수에게 부와 혜택을 집중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거의 절대 다수가 이와 같은 삶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불만은 정치에 의해 촉발될 때 투표행위로 이어진다. 불만이 투표로 이어지는 과정에 연령효과(aging effect) 등 심리작경험적인지적 매개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성장주의를 지지하고, 보수의 논리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20~40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MB, 반신자유주의 성향을 표출하는 것은 이런 매개요인이 상대적으로 나이든 세대보다 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강원택(2011)의 지적이 있다.

“세대 차이가 발생하는 한 원인은 50대 이상 세대는 고도성장, 거의 완전고용의 시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까닭에 2040세대의 고통이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금증이 드는 것은, 이런 사회적 양극화에서 50대 이상 모든 이들이 다 기득권을 갖는 수혜자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다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할까. 특히 현역에서 은퇴한 이들이 대부분인 60대 이상층에서 유독 높은 지지가 나올까. 그것은 아무래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일 것 같다. 경제가 나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좌파’는 싫다는 식의 정서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세대 간 갈등은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보다는 허구의식의 발현 때문일 수 있다. 그 허위 의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식 세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세대와 계층 갈등을 동일시해서 보려는 것은

반드시 현상의 올바른 진단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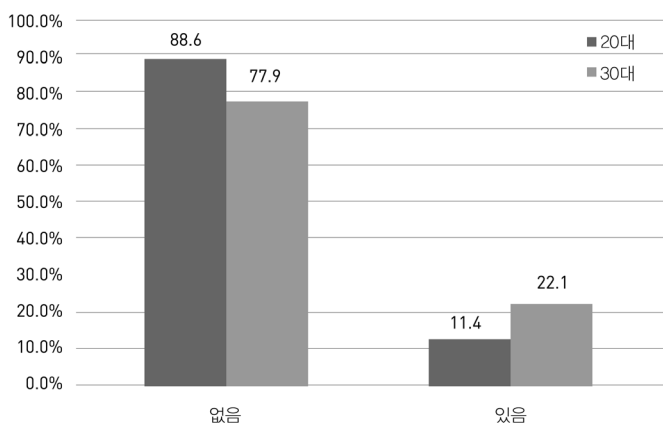
유창오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전체가 아니라 신규 진입자에게 희생을 전담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20~40대의 경제적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결국 20~40대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더 심하게 받고 있고, 게다가 경험적 요인과 같은 매개 변수에 의해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적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강하게 진보성향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가 곧 계급이라는 명제는 좀 과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최장집(2011)의 충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젊은 세대의 불만과 정치적 정향이 드러나는 진보적 투표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이유 있는 것이다. 진보적 투표 집단으로서 젊은 세대의 등장은 기존 정당체제에 이미 가시적으로 큰 충격효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세대구도’, ‘세대 간 갈등’ 등의 표현을 통해 세대를 기존의 구세대와 대창대립시키면서, 이를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진보적 투표정향이 새로운 투표자정렬(realignment)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다가오는 선거들이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 또는 새로운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가 될 것으로 전망하거나 희망하는 진단이 진보적 지식인·활동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는 열려있는 상태에 있다.

그들이 진보적 투표정향을 통하여 투표블록을 형성하고, 그것이 투표자들의 새로운 정렬을 가져오고, 그것이 정당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두 측면이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측면, 즉 정치적 대립 축을 형성하는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의사표출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 측면, 즉 이 요구를 정책 아젠다로 만들고,

집행하는 투표자가 지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정당 대안의 존재가 그것이다. 비전과 정책에서 차별성을 갖는 정당, 제대로 된 이념정당이면서도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고 공격적 언사를 남발하지 않는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앞서 언급한 청년세대의 정치의식 조사에서 83.2%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2030 청년세대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도 민주당은 성찰할 점이 많다. FGI에서 확인되듯, 반대만 일삼는 정당이나 대안 없는 정당 등으로 인식되는 대중적 이미지를 지금도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그림 15〉 2030 의견대변 정당



〈출처: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특임장관실〉

4) 대안 구도에 대한 검토

2012년 선거는 어떤 선거가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2012년의 시대정신은 뭘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이다. 1997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대선은 모두 경제선거로 치러졌다. 레이코프(2006)의 분류에 따르면, 1997년의 경

우 정권교체라는 정치전선이 표층 프레임(surface frame)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누가 잘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층 프레임(deep frame)을 형성하고 있었다. 3김과 같은 정치보스들이 건재하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경제와 무관한 인물인데다가 한나라당이 경제실정의 폐해를 숨기기 위해 대선을 경제선거로 치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착시현상일 뿐 분명 경제선거였다.

2002년 대선은 외형상 확연한 정치선거였다. 낡은 정치와 새정치 간의 대결로 치러졌기에 정치선거로 보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경제문제가 작동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었다. 20~30대가 대거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그 이전의 벤처열풍 등으로 젊은층의 경제적 욕구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 이회창은 낡은 경제, 노무현은 새로운 경제를 구현할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007년의 경우에도 반노무현 정서, BBK 등으로 인해 외견상 정치선거의 성격이 강했지만 선거판세를 움직인 기축요인은 경제였다. 술한 도덕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성장경제에 대한 열망이 깊었던 탓이다. 민주화세력에게 10년을 맡겼는데, 별 신통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중의 절절한 삶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않았기에 실망-열망의 사이클이 작동한 것이다.

‘현실’은 또 어떤가. 그 어떤 때보다 삶의 문제가 절박하다. 1% 대 99%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MB 정부 들어서서 경제는 부자대기업 위주의 시장만능 성장경제를 지향했다. 그 결과 절대 다수의 삶이 나빠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복지정책에 대한 호응이 과거와 달리 강하게 표출되는 것도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이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 전통적 정치에 식상한 시민적 염증’이라는 박명림의 해석도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샤츠슈나이더(2008)의 지적처럼, 경제적 이해는 정치세력을 통해 관철된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강타한 것도 단순히 경제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를 통해 관철됐기 때문이다. 바르텔(2010)은 단언한다. ‘문제는 정치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면 그만큼 정치적 선택도 중요해진다.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생활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정치선거다 경제선거다 하는 구분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정치냐 경제냐 하는 선택이 아니다. 과거에는 정치세력 간에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해법,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제냐에 대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에서 경제정의론 또는 경제민주화론은 경청할 만하다. 김대호(2010)는 시종일관 복지보다 정의가 먼저라고 외치고 있다. ‘선정의(공평) 후복지론’이라 할 수 있다. 1차 분배 구조인 일자리, 소득과 보상체계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너무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것만으로 진단해서는 안 되고 왼쪽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때문에 좌파적 개혁과 우파적 개혁을 병진해야 한다. 김세원(2011)도 ‘개혁’ 없이는 ‘진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복지강화, 즉 ‘진보’를 위해선 시장·국가·사회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 동안 잊혀졌다 MB 정부 들어선 이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작가 조정래가 소설 〈허수아비춤〉(2010)에서 경제민주화를 거론한 것이 인상적이다. 모든 기업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경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그리하여 소비자로서 즐기게 기업들을 키워 온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고루 퍼지고, 또한 튼튼한 복지사회가 구축되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론의 이론가는 유종일(2011)이다. 경제민

주화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추구한다. 그는 논지는 이렇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 핵심은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에 항의해 일어난 월가 점령 시위가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함께 점령하라’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를 반대하고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이다. 소수 특권층만 살찌는 경제가 아닌 기회와 발언권과 분배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경제를 주장한다. 기득권자들의 손아귀에서 돌아나는 형해화된 민주주의가 아닌 힘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시위는 진작 시작됐다. 김진숙의 고공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운동이 그것이다. 나아가 재벌독식에 항의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외침도 있고, 수출대기업을 위한 한미 FTA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농민들의 저항도 있다. 무너지는 중산층, 차별 받는 비정규직, 늘어나는 근로빈곤층, 3포 세대라고 자조하는 청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빈곤율과 자살률에 신음하는 노인층, 이들 모두의 한숨소리가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숨죽인 절규가 아닐까. (...) 한국의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정체성의 중심에 뒀야 한다. 그리고 야권통합은 바로 경제민주화 동맹의 구축과정에서 이룩해야 한다.”

노동문제를 핵심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800만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경제적 이해를 정치적 목소리로 묶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논쟁이 진행되면서 노동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노동 없는 복지나 비정규 문제 해결 없는 복지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아직 좋은 일자리 이슈는 아직 우리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법에서도 여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든 야든 일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강조할 따름이다.

최근에 복지, 노동,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박상훈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불평등 심화’이다. 이 불평등은 양극화, 비정규직, 신빈곤층,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소외, 불만,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복지를 키워드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귀영(2011)은 무상급식으로 나타난 복지문제, 희망버스로 나타난 노동문제,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재벌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차기대선은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경제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법적 규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 진보진영이 설득력 있는 제시해야 하는 선거로 규정한다. 조국(2011)의 문제의식도 거의 같은 맥락이다.

“안철수 현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이에 기초한 성공을 희구하는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의 열망의 산물이다. 재벌에게 영역을 빼앗기고 하청단가 맞추느라 헉헉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학점과 스펙 관리하느라 청춘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젊은 ‘잉여’들의 울분이 그 뒤에 깔려 있다. 국가가 자신들의 꿈과 고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을’들은 파스한 위로와 조언을 주는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를 만난 것이다. 사실 ‘합리적 중도’라 할 수 있는 안 원장이 중소기업이라는 ‘동물’을 가두어 죽이는 ‘동물원’이라고 재벌을 비판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반한나라당’을 선언한 것은 그가 ‘좌파’라서가 아니라 재벌이나 한

나라당 등 집권세력의 행태가 비합리와 불공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해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반 토막이다. OECD 바닥 수준의 복지로 사회적 안전망이 찢어졌기에 해고는 바로 몰락 또는 죽음을 뜻한다. 그러나 재벌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를 시도 때도 없이 ‘정리’ 한다. 집권세력은 겉으로는 ‘공생발전’ 또는 ‘자본주의 4.0’ 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철두철미 ‘정글 자본주의’ 를 실천하고 있다. ‘희망버스’ 에 몸이나 마음을 실은 사람들은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체제를 반대하기 위하여 나섰다. 자본의 논리에 맞서는 노동의 강화, ‘사회적 살인’ 을 막기 위한 약자와의 연대, 이것이 바로 김진숙 현상의 핵심이다! (…)

안철수와 김진숙 사이에 간극은 분명 존재하며, 안철수 현상만으로는 김진숙의 절절한 요청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사실 양자는 겹치는 면이 많다. 자본 중심의 세상에서 합리와 공정이 안착하려면 노동의 힘이 커져야 한다. 사실 ‘따뜻한 자본주의’ 가 되기 위해서도 노동이 중요하다. 노동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합리와 공정이 세상의 기본규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이제 안철수 현상과 김진숙 현상은 만나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 을 만들어내야 한다. ‘철수’ 와 ‘진숙’ 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과 체제를 만들어 낼 때 한국 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시작될 것이다."

교육에 주목하는 흐름도 있다. 이기정(2011)은 복지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주장은 간명하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우리 시대의 최고 화두가 되어야 한다.’ 엄청난 사교육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대학생들

이 청년실업의 고통에, 비정규직의 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는 분명하다. 또 반값 등록금 문제가 단번에 쟁점 이슈로 떠오른 것에서도 교육이슈의 폭발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노동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민주당은 3+1 복지정책에 버금가는 대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설사 정책은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드러내고, 쟁점화하고, 차이를 부각시키고, 대중을 참여시키는 ‘정치적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제시하면 그것은 술하게 많은 공약 중 일부로서 묻혀버린다.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당면한 야권 통합 작업 때문에 손이 달리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책에 대한 준비, 정책 이슈를 통해 차이를 부각시키는 정치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다. 립셋-로칸이 말하지 않았던가. ‘유권자에 앞서 정당 대안이 먼저 존재한다(party alternative are older than the electorate). 무엇이 됐든 민주당(통합정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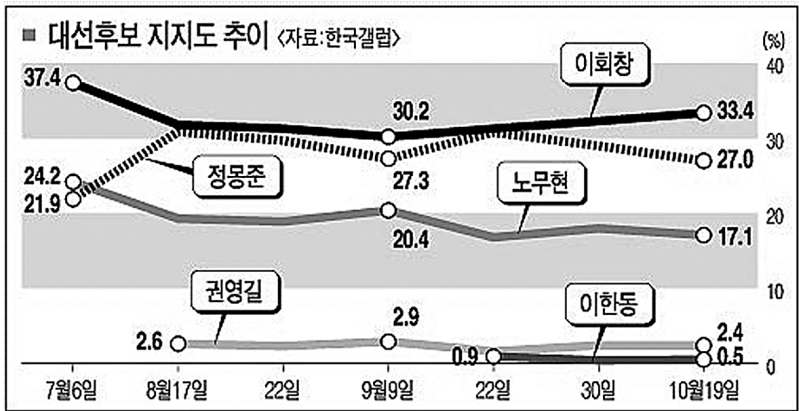
5) 중도노선 또는 진보노선?

흔히 중도를 잡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점유비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진보와 보수, 중도의 비중은 대개 3:3:4로 나타난다. 정당 지지율에서 보더라도 50%를 넘기는 정당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과반을 이루려면 당연히 기존 지지에다 ‘+ α ’를 더해야 한다. 따라서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인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중도를 잡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다.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대선

에서 당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지지율은 한 때 갤럽조사에 의하면 16.8%로까지 추락했다. 이유는 후보가 지지기반과 불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을 통해 당선된 직후 50%를 넘는 지지율을 얻었으나 김영삼 전대통령을 찾아가 이른바 영삼시계 운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런 구태에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 것이다. 그러다가 3위 후보로 밀리면서 본래의 제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상승했다. 11월 24일에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 직전의 갤럽조사에서 노무현은 25.4%를 기록했다. 그 흐름에 탄력 받아 마침내 후보단일화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2002년의 추세를 단순화시켜 보면, 진보성향의 지지층이 먼저 결집하고 나중에 중도성향이 합류한 것이다.

〈그림 16〉 16대 대선후보 지지도 추이



〈출처: 조선일보〉

2007년의 경우는 다른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진다. 한나라당이 먼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후에 중도성향을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보수층의 대표

성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다. 당이 보수표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α’, 즉 중도표를 흡수할 수 있는 이명박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보수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했더라면 이명박의 중도노선은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번의 대선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별화된 정체성의 정립이 우선이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집토끼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이 집토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그 부담은 후보가 져야 한다. 안철수가 부인함으로써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제3 신당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당(통합정당)이 갈 길은 자명하다.

중도는 자신이 이념적으로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더 간단히는 이념이나 정당의 프리즘을 통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슈나 인물이다. 특정 이념이나 정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때 그 때의 이슈나 인물, 분위기 등의 단기 요인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 따라서 중도의 지지성향은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중도의 지지를 받더라도 새로운 이슈나 인물의 등장에 의해 쉽게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트렌드나 판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수든 진보든 자기 성향의 표를 먼저 결집해야만 상대와 경쟁할 수 있는 지지율이 생긴다. 그래야만 중도표가 따라온다. 미국의 경우에도 당내 경선에서는 본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본선에서는 중도표를 잡는 데 중점을 두는 건 거의 철칙이다.

뭐니 뭐니 해도 진보성향의 표를 잡는 게 우선인 이유는 유권자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요즘의 유권자들은 과거보다 진보적 정책을 통한 당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성장이나 분배나 하는 여론조사에서 분배를 선호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미 2010년의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위력이 발휘됐었던 것도 좋은 예다.

대중이 원하는 데 뭘 더 고민하라. 물론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그 재원문제까지 거론하면 아직 복지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진보의 방향으로 가되, 그 수준과 폭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흔히 보수는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진보는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보수는 현실을 보고, 진보는 내일을 본다는 말도 있다. 보수는 결과를 중시하고, 진보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느 것 이든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2011)의 ‘무학의 통찰’이 재미있다.

“우가 세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보고 내가 먼저 포식자가 되어 살아남아야겠다는, 공포에 대한 동물적 반응이라면, 좌는 정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접근하는 이들이야.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차피 제한된 자원이니 이걸 두고 경쟁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좌도 정글의 불확실성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우가 그 공포에 압도되어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반응하는 거라면, 좌는 그 공포를 나눠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공포의 몫을 줄여서 해결하려 하는 거라고. 문제는 밀림 그 자체에 있는 거니까. 우는 본능적 반응이라면, 좌는 논리적 대처야.”

이런 틀로 보면 진보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서 일체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최소한 정체성에서 동의를 얻어내야만 투표할 동기가 생기는 정당후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던지는 합의도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보는 보수에 비해 싫어도 찍어주는 경향이 크지 않다. 상대가 나쁘다는 공포의 동원이 아니라 내가 왜 옳은지를 이해시키는 사랑의 동원이 진보층을 설득하는 기본문법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스스로 진보라는 하는

사람들을 주(主)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후보라면 선부른 중도 노선으로
는 통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좋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고 편차가 크다. 따라서 진보 진영이 추진하
는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날 때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보는 한귀영(2011)의 주장도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중도 중시의 이론적 근거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중위 투표자
(median voter)이론이다. 유권자들이 대거 중도에 몰려 있고, 유권자들
은 자신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당과 후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과연 유권
자들이 중도에 대거 몰려 있기는 하나?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
르면, 사실이 아니다. 중도의 규모가 진보나 보수에 비해 약간 클 뿐 중
도에 몰려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이 전제부터 지금 우리의
사정과는 맞지 않는다.

또 유권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한다는 논지에도 이견이 있다. 이념적 거리(distance)보다 방향과
강도(direction and intensity)를 강조하는 논지도 있다. 전자를 근접성
이론이라 하고, 후자를 방향성 이론이라고 한다. 조성대와 앤더스비
(2003)의 영국선거 분석에 따르면, 여당의 경우엔 근접성 이론이 적실성
을 갖고, 야당의 경우엔 방향성 이론이 적실성을 갖는다. 여당의 경우
아무래도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유권자들이 용이
하게 정책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수궁
이 가는 분석이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열으면 제삼자가 알아채
기 쉽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야당이 방
향성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계층인가, 지역인가?

2007년~2008년 한나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보수+영남연합이었다. 1997년 이인제, 2002년 노무현으로 인해 영남의 일각이 무너졌던 과거와 달리 2007년엔 영남이 하나로 뭉쳤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 여야대립을 좌우 대결로 의제하는 데 성공해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보수+영남연합에 중도와 수도권이 합세해 거대한 우위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 때 그 우위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지나면서 이 구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부산경남(PK)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세종시 논란 등으로 원래부터 약세였던 충청에서의 민심이반도 심각했다. 보수의 아성이 라고 여겨지던 강원에서마저 한나라당은 연거푸 도지사 선거에서 패했다. 보수층에 합세했던 중도층 역시 반대로 돌아섰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역연합으로 가는 건 어떨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 가장 단순하게는 권역별 인구비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호남에다 충청, 강원, 제주를 다 합쳐도 200만 명이 좀 안되게 부족하다. DJP연합에 빗대도 충청의 맹주가 없기 때문에 재현하기 힘들다. 2002년을 벤치마킹하더라도 노무현 같은 후보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

PK 등 일부 지역의 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강원, 충청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은 20~40대의 지지가 큰 바탕이 됐다.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김두관이 승리한 원동력은 20~40대에서 6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경길이 선전한 것은 20~40대가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준 덕분이다. 심지어 대구에서도 20대의 43%, 30대의 38%가 야권 후보를 지지했다. 한나라당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경북에서도 20~30대는 30% 넘게 야권후보를 지지했다. 결국 젊은 세대

가 정치변화, 이탈의 동력이라는 사실이 선거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표 6〉 총선에서의 정당별 패권적 지역득표율(13-18대 총선)

	정당	전국득표율(%)	지역득표율(%)	지역균열지수
13대 (1988)	민정당/통일민주당	57.8	79.4	1.37
	평민당	19.3	69.1	3.58
	공화당	15.6	42.1	2.70
14대 (1992)	민자당(경상)	38.5	70.1	1.82
	민주당	29.2	62.1	2.13
	민자당(충청)	38.5	40.1	1.04
15대 (1996)	신한국당	34.5	43.8	1.27
	국민회의	25.3	71.6	2.83
	자민련	16.2	47.0	2.90
16대 (2000)	한나라당	39.0	56.0	1.44
	새천년민주당	35.9	66.8	1.86
	자민련	9.8	34.8	3.55
17대 (2004)	한나라당	35.7	52.1	1.46
	열린우리당	38.3	55.3	1.44
	자민련	2.8	15.6	5.57
18대 (2008)	한나라당/친박연대	50.7	68.6	1.35
	통합민주당	25.2	65.3	2.59
	자유선진당	6.8	28.7	4.22

〈출처: 정병기, 2009〉

경상: 민정당+통일민주당, 민자당(경상),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라: 평민당, 통합민주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충청: 공화당, 민자당(충청), 자민련, 자유선진당

지역균열지수=지역 득표율/전국 득표율

*17대와 18대 총선은 비례대표 득표율

앞서 지적한 대로 젊은 세대의 이탈이반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세대·계층으로 접근해야지 지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 프레임으로 가면 영남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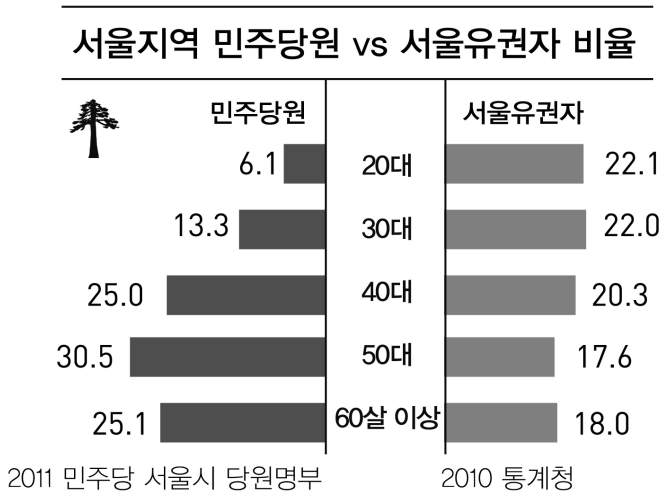
으로 행동에 나설 여지를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지역의 이탈도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귀영(2011)이 이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보수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영남, 특히 이른바 PK지역의 MB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도 이러한(사회경제적) 맥락 위에서 봐야 할 것이다. 민심 이반의 결정적 계기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영남권신공항 무산 문제 등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경제가 휘청거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 대중의 삶이 휘청거린다는 데 있다.”

지역연합으로 가면 지역주의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지역이 아닌 다른 기준을 통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문우진(2005)의 지적대로 정당들 간에 정책적 차별성이 적은 경우 지역변수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커지면 자연히 지역주의 투표는 감소할 것이다. 지역프레임이 세대·계층적 이해의 발현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야권이 유리하다. 야권에서도 지역주의에 암묵적으로 호소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당의 진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지역주의의 틈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그래야 여권의 지역주의 공세를 차단약화시킬 수 있다.

5. 맺으면서

정치의 강점이자 약점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있다면 선택과 그에 따른 전략이 있을 뿐이다. 이 글 역시 하나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입장을 하게 되는 선택, 그 입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해 보는 것이 애초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더 많은 토론, 감론을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림 17〉 서울지역 민주당원 VS 서울유권자 비율



〈출처: 한겨레신문〉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노쇠화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늙은 민주당’으로 표현할 정도다. 31만 명에 달하는 민주당 서울지역 당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고 그렇게 규정했다. 20대의 비율이 6.1%, 30대는 13.3%에 불과했다. 40대 25.0%, 50대 30.5%, 60대 이상은 25.1%였다. 서울지역 유권자 구성과 현격한 부조응(mismatch)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22.1%, 30대가 22.0%, 40대가 20.3%, 50대가 17.6%, 60대 이상이 18.0%이다. 결국 민주당은 20~30대는 과소 대표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3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의 투표결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전체 3만 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대략 1만 8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투표자 중에서 39세 이하가 약 40%, 40세 이상이 60% 정

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유권자 구성에 못 미치는 것은 하지만 얼추 근접한 구성비를 보인 것이다. 이런 투표자 구성의 결과 민주당의 당원조직표에 의한 대역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데이터를 통해 두 가지가 명약관화해졌다. 첫째, 민주당이 20~30대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당이 노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노쇠한 정당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노쇠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시대흐름, 대중의 일반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태에서 노쇠함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노선도 문제지만 이것도 못지않게 문제다.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야 어차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중도내지 보수적 유권자들을 분할해서 획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중도담론이 사실은 보수 헤게모니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최장집(2010)의 일갈이다. 이처럼 혁신적 동력을 만들어 내면서 통합을 추진하지 못한 채 그냥 밀어붙이는 것 역시 정도는 아니다. 통합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통합을 거부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있지 않다.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해야 한다. <The political brain>을 쓴 드류 웨스턴은 얼마 전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오바마의 실패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 정공법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내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감동 있는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

이기는 길과 옳은 길이 다르다면 고민하는 게 옳다. 그러나 옳은 길이 곧 이기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지금 민주당, 나아가 통합정당이 가야할 길은 옳은 길이다. 그래야 이길 수도 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원칙이다.

사족: <대중의 반역>을 쓴 가세트가 이렇게 말했다. “놀라거나 이상
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에 대한 첫걸음이다.” 과문하고 우둔한
자가 많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으로 끝맺음하려 한다.

〈참고문헌〉

- 강양구. 2011. “10.26은 계급투표? 오버하지 마라”. 〈프레시안〉. 2011년 10월 28일자.
- 강원택. 2011. “경제약자들이 선거 축으로”. 〈경향신문〉. 2011년 10월 30일자 칼럼.
- 김기원. 2011. “개혁없이는 진보 어렵다”. 〈창비주간논평〉. 2011년 6월 8일자.
- 김대호. 2011. “진보의 집권? 그거 어렵지 않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세균 편. 2003.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여준. 2011. 『닥치고 정치』. 푸른숲.
- 김영순. 2011.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시민과 세계』. 제19호. 참여사회연구소.
- 김윤철. 2011. 〈안철수 현상, 2012년 대선, 민주당〉(내부 참고용 비공개 페이퍼).
- 김윤철. 2009. 『정당』. 책세상.
- 더플랜. 2011. 〈민주당 집권전략 수립을 위한 FGI 결과보고서〉(비공개).
- 문우진. 2005. “지역본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한국과국제정치』. 제21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민경우·김유진·강형구. 2011. 『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열다섯의공간.
-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2011. 〈비정규직문제 해결을위한 민주당의 대안〉.
- 민주정책연구원. 2011. 〈10.26 보궐선거 결과 평가〉(집담회 자료).
- 민주정책연구원. 2011. 〈2012년 민주당 집권전략 보고서〉(비공개).

민주정책연구원. 2011.. 〈2012년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

백기철. 2011. “안철수와 486 대망론” . 〈한겨레신문〉. 2011년 12월 4일자 칼럼.

샤츠슈나يدر. 2008. 『절반의 인민주권』 . 후마니타스.

샤츠슈나يدر. 2010.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 페이퍼로드.

서복경. 2010.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 『현대정치연구』 . 제3권 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 후마니타스.

안홍욱임지선. 2011. “안철수 현상 그 이후” . 〈경향신문〉. 2011년 9월 28일자 기사.

오르테가 이 가세트. 2010. 『대중의 반역』 . 누미노스.

월터 아이작슨. 2011. 『스티브 잡스』 . 민음사.

유종일. 2011. “민주당, 버려야 산다” . 〈경향신문〉. 2011년 10월 13일자 칼럼.

유창오. 2011. 『진보세대가 지배한다』 . 후마니타스.

이기정. 2011.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 인물과사상사.

이태희·김외현. 2011. “늙은 민주당…2030 젊은동력 바닥” .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8일자 기사.

장덕진. 2011. “뉴미디어와 정치공동체의 귀환” . 〈2012년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학술대회 자료집). 민주정책연구원.

정병기.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현황과 전망” . 『대한정치학회보』 . 제17집 2호.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 . 『현대정치연구』 . 제1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조국. 2011. “철수와 진숙은 만나야 한다” . 〈한겨레신문〉. 2011년 9월 1일 칼럼.

- 조의준.** 2011. “트위터 이용자, 2030이 88%…50대는 2%”. <조선일보>. 2011년 11월 3일자.
- 조정래.** 2010. 『허수아비춤』. 문학의문학.
- 천관율.** 2011. “2012년 시대정신 복지”. <시사인>. 2011년 9월 10/17일자 한가위 합병호.
-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8.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나무
- 최장집.** 2011. <한국정치와 젊은 세대>. 성공회대 강연 자료집.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 한귀영.** 2011. <2012년 대선 구도 및 이슈>(내부 참고용 비공개 페이지)
- 한양대학교.** 2011.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특임장관실.
- 한윤형·이재훈·김완·김민하.** 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 메디치.

- Anderson, Kristi. 1979.**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major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nthony Downs.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 David Plouffe. 2009.** <The Audacity to Win: The Inside Story and Lessons of Barack Obama's Historic Victory>. Viking Adult.
- George Lakoff, 2006.**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Farrar, Straus and Giroux.
- Giovanni Sartori, 1994.**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New York University Press.
- Larry M. Bartels. 2010.**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1.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The Free Press.
- Michael Lewis. 2011.** <Moneyball>. W. W. Norton & Company.
- Michael S. Lewis-Beck, William G. Jacoby, Helmut Norpoth, Herbert F.
- Wei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PSR>. 57.
- Sungdai Cho and James W. Endersby. 2003.** 'Issues,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d British General Elections: A Comparison of Proximity and

Directional Models'. < Public Choice> Vol. 114, No. 3/4.

V. O. Key. 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Crowell.



민주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안내

2011년 IDP 정책연구 시리즈

2011-01	시대정신을 담은 국가발전모델 : 사회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동호
2011-02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 및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구상	박순성·김종욱
2011-03	어떻게 ‘수도권정당’ 이 될 것인가 :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이진복
2011-04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김동영
2011-05	2012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당면과제와 전략적 구상	장환석
2011-0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홍현익
2011-07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문병주
2011-08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영필
2011-09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은옥
2011-10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고영국
2011-11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유종일
2011-12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김용익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 박정식
2011-14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강령을 통해서 본 연속성과 변화	문병주·김은옥·오상택
2011-15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영필·박정식

IDP네트워크 정책연구총서

- 2011-0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
- 2011-02**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 2011-03**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연구
- 2011-04**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 2011-05**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1-06**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권두언	4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다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창간기념 인터뷰	8	2011년 민주당의 진로와 2012년 집권 플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연대의 길을 찾다	20	좌담 - 6.2 동시지방선거 민주진보연대의 성과와 과제 강기갑, 노회찬, 백승현, 정세균, 박순성
	48	연합정치의 필요성과 실현방도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60	연합정치: 주장과 쟁점 박일환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70	민주진보대통합당과 평화복지정권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 야권연대연합특위위원장)
간접특별기고	79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사람 미조이 유타카 (오사카전기통신대학 기초공학학과 교수)
논단	100	언론편향과 민주주의의 위기: '조중동' 증편 허용과 정치학 정연우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115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전략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27	물가급등의 원인과 정책대응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2011 한국사회 복지논쟁, 무엇을 할 것인가?	138	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54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64	복지국가의 가치와 진정성 김동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8	왜 '민주당 보편적 복지 3+1' 인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와 사람들	192	법은 누구의 편인가? 육아휴직서와 사직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성들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200	웰빙 국가시대, 교육의 새판짜기 제2의 무상급식 운동을 찾아서 김명신 (민주당 서울시의원)
	239	고령화 시대 젊게 사는 메시지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시대 공감 민주진보, 미래세대와 通!하다.	208	방담 -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대학생위원회와의 만남
	220	그들과 통하는 길 안수찬 (한겨레21 사회팀장)
	232	청년에게 민주당을 보낸다 설인수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38	미래세대의 목소리 한가람, 소재현, 백윤정
시사칼럼	248	아랍세계의 민주화 운동과 중동 정치지형의 재편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이란어과 교수)
	253	전세대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연구원 소식	259	창간 축하메세지
	261	연구원 동정

권두언	4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의 길 2번째	10	특별기획여론조사: 통합인가? 연대인가? 이철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5	연합의 방식: 통합인가 연대인가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38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전민용 (희망과대안 운영위원)
논단	54	권력기관 개혁의 핵 - 검찰개혁 김인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0	뉴타운사업의 실패구조와 근본적 개편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92	한국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특집 6.2 지방선거 1년, 지방자치를 점검하다	112	르포: 민선5기 지방자치 1년, 현장을 가다 윤영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6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 - 공존의 시대를 향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다
	136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148	4대강사업: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친 악영향과 위기해소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속기획
민주주의와
사람들

- 160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 165 인터뷰 : 시대정신과 민주당의 진로
임채정 (전국회의장)
- 182 퇴행하는 민주주의, 추락하는 인권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 190 한국의 민주주의자 : 다산 정약용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99 세계 진보정치의 현장을 가다 :
오슬로 진보 거버넌스 회의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대 공감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212 사회의 최약자로 이름 붙여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김향미·임아영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 223 한국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다문화정책의 개선 방향
조화성 (공주대학교 강사)
- 23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다
유승희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 249 여성들의 목소리
이혜진 (대학생), 전해영 (워킹맘), 이부원 (전업주부)

시사칼럼 &
서평

- 258 검찰 개혁 유감
정성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264 시장에 종속된 국가 역할의 복원을 바란다
정경환 (민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269 진보개혁진영, 한반도 이슈를 준비할 때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 274 [서평] 경제학을 리콜하라(이정전/김영사)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소식

- 282 연구원 동정
- 285 신착보고서
IDP정책연구
- 287 독자 코너(창간호를 읽고)

권두언	4	정치의 위기와 인의(仁義)의 정치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의 길 3번째	8	야3당 정책연구소장에게 듣는다: 2012 정책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23	6.2 지방선거의 경험에서 본 정책연합의 의의와 방향 한태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38	어떤 정책연합이어야 하는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논단	50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평가와 새 시장의 리더십 조건 조명래 (단국대 교수)
	67	한국민주주의와 부마민주항쟁 이행봉 (부산대 교수)
	77	무상보육과 아동의 권리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103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재검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특집 민생을 생각한다	116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28	한국의 노동구조와 비정규직 개혁과제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9	학생친화적 정부가 필요하다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
	159	가난한 집, 집 때문에 더 가난해지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연속기획
민주주의와
사람들

- 174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
- 182 민주당 원로 릴레이 인터뷰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 196 열정과 헌신으로 2012 민주정부를 준비하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 202 한국의 민주주의자 2:함석헌, 한국의 민주주의자
김성수 (『함석헌평전』 저자)

시대 공감
초고령
사회의 명암

- 212 특별기고: 초고령 사회와 노인의 존엄 - 일본의 경험
이노우에 히데오 (일본 가나자와대 교수)
- 231 르포: 빈곤과 고독사 그리고 독거노인
김혜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239 고령화 시대 젊게 사는 메시지
선진규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시사칼럼 &
서평

- 242 서울시 재정분석을 통해 본 복지정책의 가능성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247 SNS선거, 민주당의 선택은?
장덕진 (서울대 교수)
- 251 [서평]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정성표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57 [서평] 대한민국복지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소식

- 264 연구원 동정
- 267 신착보고서
- 269 독자 코너(여름호를 읽고)

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발행일 2011년 12월 7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